

집중조명 중국의 WTO 가입이 국내 생약농업에 미치는 영향

“중 WTO 가입은 한약시장 완전개방 신호”

국산약재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 급선무 안정적 국내 수급대책 서둘러 마련돼야

중국이 지난해 말 미국과 무역협정을 타결한데 이어 유럽연합(EU)과도 시장개방을 위한 쌍무 무역협정에 서명함에 따라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이 사실상 확정됐다는 관측이다.

WTO사무국은 이번 중국과 EU간 무역협정 타결에 따라 이달 하순께 중국의 WTO 가입을 심사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WTO사무국은 앞으로 중국의 가입의정서에 대해 심사작업을 벌인다. 중국의 가입심사는 중국 정부의 농업보조금 지급, 중국 무역법의 투명성 확보 등 많은 이슈에 대해 다자간 협상을 벌이게 된다.

농업보조금 문제는 중국의 WTO가입을 위해 지난 15년간 계속된 양국간 협상에서 합의하지 못하고 남은 주요쟁점이다. 농업인구가 3억에 이르는 중국은 국내농업 지원에 대한 WTO규정상 농업생산의 10%까지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개도국 대우를 끈질기게 요구해왔다.

미국은 이에대해 5% 이내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선진국 조항의 적용을 주장해왔으나 지난 3월 7~8%까지 한도를 높이겠다는 수정제의를 했고 롱 부부장은 이날 이를 '건설적'인 제안이라고 평가했다고 한다.

WTO사무국측은 중국의 가입을 위한 의정서 작성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중국의 정식가입은 일러야 가을께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 국내 생약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중국이 WTO 연내 가입을 서두르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생약농업의 대응책 강구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다. 중국의 WTO 가입은 곧 한약재 시장의 완전개방을 의미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우선 국내 생산자 보호차원에서 운용중인 한약재 수급조절 제도는 시행 자체가 무의미해질 우려가 크다.

한약재 수급조절제도는 지난 93년부터 정부가 43종을 시작으로 국내 생산자 보호를 위해 일부 품목(현재 26종)을 수급조절품목으로 묶어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제도. 그러나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다자간 무역협상에 근거해 수급조절품목의 완전개방을 요구해 올 경우 이를 막을 명분은 없는 셈이다.

물론 값싼 수입약재 반입으로 국내 생약농업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산업피해구제신청을 통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또는 해당품목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조치등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특정 농산물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 그에 상응하거나 더 큰 우리것을 내어주지 않으면 안되 그 또한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최근 무역분쟁으로까지 심화되고 있는 '마늘분쟁'이 그 좋은 예다.

값싼 중국산 마늘의 수입증가가 국내 농가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판단에서 정부는 중국산 마늘에 대해 315%의 관세를 부과했다. 우리정부가 중국산 마늘에 대해 긴급 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취한데 대해 중국은 국내 5억달러 이상의 수출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에 대한 수입중단조치라는 보복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또 얼마전엔 마늘에 이어 소금 옥수수 등 자국산 1차상품의 수입확대를 요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한 국산 제품의 수입중단 등의 무역보복을 하겠다는 입장을 우리정부에 공식 통보해 오기도 했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마늘 분쟁은 단지 중국이 WTO에 가입한 뒤 어떤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한 전조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인즉, 미국이나 여타 나라의 농민들이 중국 농업시장의 개방을 기대하는 한편 중국의 농민들은 경작 농작물을 줄이려 하지 않는 대신 일반적 곡물생산에서 벗어나 마늘과 같은 현금작물·시장용 작물쪽으로 옮

겨 농작물 생산의 다양화 쪽으로 나가기 시작할 것이란 분석이다. 시간이 갈수록 환금작물로의 경작전환으로 세계 시장에 대한 중국의 과일, 야채, 약초의 거대물량이 들이닥칠 것이며 이번 마늘분쟁과 같은 분쟁이 좀더 다반사로 자주 일어날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한약재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이고 보면 WTO가입이 우리 국내 생약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지를 예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 중국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실제로 중국은 최근 WTO 가입을 앞두고 세계적인 농업강국을 목표로 농업생산의 다양화, 농산물의 고품질화를 위해 농업 및 농촌경제 구조 개선을 서두르고 있다.

한약재의 경우에도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 : 우수농업규범) 제도를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

GAP제도란 고품질 한약재 생산을 위해 한약재를 재배하는 단계부터 적절한 산지선정, 우수 종자관리, 무오염 병충해 방지법, 수확에 이르기 까지 생산의 전과정에 대한 품질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제도.

중국은 또, 약용작물의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생산관리를 위해 품목별 주산단지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유전자원의 관리 및 보호차원에서 야생 채취 약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감초나 마황을 비롯 70여종의 야생 채취 약초에 대한 무작위 채취를 금하고 채취에서부터 가공, 수출까지를 허가제로 운영, 정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한약재의 고품질화를 위한 중국의 이같은 계획이 실현될 경우 세계적인 농업강국으로, 한약재 종주국으로 부상하게 되는 것은 물론 미국이나 일본으로의 한약재 수출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큰 타격이 우려된다. 더구나 가격과 물량, 여러면에서 열세에 처해있고 갈수록 생산기

반이 열악해지는 국내 생약농업 여건상 중국의 WTO가입은 막연한 우려를 넘어 훨씬 심각한 현실로 다가오리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 한약시장 개방 대응책은 없나?

한편에서는 한약시장이 완전개방되고 나면 수급조절품목으로 묶여 특정 수입업자에 의해서만 반입되던 수입약재의 경우 유통시세가 당장은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수입약재 시세 하락은 국산 약재 판로에 심각한 타격을 미칠 것이고 소량이나마 유지돼 오던 국내 생산기반이 크게 잠식당할 것이란 우려가 지배적이다.

또한 국내 생산기반이 무너지고 난 후에는 국내 생약산업이 거대한 중국시장에 종속될 수밖에 없으며 국내 소비를 위한 한약재를 수입해오기 위해 비싼 대가를 치뤄야 할 것이란 우려는 비단 어제 오늘의 것이 아니다.

현재 한약시장에서 무분별한 수입약재 반입으로 인한 폐해중 가장 심각한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국산과의 혼용 문제도 이들 수입약재에 대한

체계적인 유통관리의 개선 없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대해 관련전문가들은 “지금부터라도 생산원가 절감과 고품질화를 통해 국산한약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할 때”라고 지적하고, “한약재시장의 완전 개방에 대비 무엇보다 국산 한약재가 수입약재와 섞이지 않고 제값 받고 유통될 수 있도록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유통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차원에서 수급조절품목 중 경쟁력 제고의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선정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국내 생산기반이 없는 야생채취 약초의 경우 중국정부의 엄격한 관리로 인해 늘 상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지금부터라도 이들 고가 및 야생약초에 대한 최소한의 국내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약재 부문은 다른 산업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당장의 부가가치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나 생약산업은 국민보건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경제논리로만 따질수 없는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마늘분쟁을 가리켜 중국이 WTO가입을 앞두고 자국의 농업보호를 위한 기선제압용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생약농업도 '소탐대실'이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마늘분쟁을 거울삼아 국산 한약재의 경쟁력 제고 방안이 서둘러 마련돼야 할 것이란 지적이 높다.

(문정희)

국과위 “한약재 유전체 연구 주력”

최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위원장인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한 생명과학 분야의 핵심은 전통산업과 생명공학을 접목하는 방안에 대한 것이다. 과학기술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5개 관계 부처가 공동 마련한 이 안은 곧 각 부처가 관련한 전통산업에 유전자재조합, 복제기술, 세포배양 등 생명공학 기술을 접목해 미래산업으로 연결시킨다는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한의학의 축적된 지식을 활용한 한약재 유전체 연구에 들어간다는 것. 인삼·녹용 등 주요 한

약재의 유전체 분석을 통해 약효 성분이 강화된 식품, 의약품 등의 한방 기능성 신소재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국과위는 이를 위해 자생 식물 추출물 은행(3000종)을 구축하고 올해 30억원을 투입, 국내 천연물 자원을 활용한 화합물 유전체학 연구에 나서 신약과 식품의 약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